

종합

시설

크루즈 전남 기항, 지역관광 활성화 계기로

내년부터 전남지역에서도 본격적인 크루즈 여행 시대가 열리게 됐다. 세계적인 크루즈사인 '씨번 크루즈 라인'(Seabourn Cruise Line)이 목포와 여수항에 취항하기 때문이다. '씨번 크루즈 라인'은 내년 3월부터 목포와 여수를 정구 기항지로 한 크루즈 상품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씨번 크루즈 라인'은 전 세계 여행객들이 뽑은 최고급 크루즈 라인 중 하나로 씨번 프라이드(Seabourn Pride)호 등 여러 척의 초호화 크루즈선을 보유하고 있다.

전남지역 항구가 크루즈 여행의 정구 기항지가 되는 이번이 처음이다. 크루즈 전남기항을 지역 관광 활성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관광 인프라를 잘 활용하여 특색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도내 4개 군에 지정돼 있는 슬로시티와 민속문화와 같은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경쟁력있는 관광 상품으로 내놓아야 한다. 전남도가 크루즈 정구 기항에 앞서 '씨번 크루즈' 본사와 국내 여행사의 상품개발 담당자들을 초청해 도내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답사를 계획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크루즈산업은 파급효과가 일반 관광보다 매우 크다. 외국인들이 대부분인 데다 일반 관광객보다 구매력이 높아 지역 특산물 판매 증대도 기대되고 있다. 또 선박운항에 필요한 유류와 식재료 등 물품 구입 비용도 상당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전망된다.

광주·전남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으나 열악한 접근성 등으로 외국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크루즈 전남기항이 지역 관광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광업계는 물론 지역주민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민생활 안정위한 물가전략 마련해야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작년 7월 5.9%를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그리던 물가가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물가를 선행하는 생산자물가도 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세는 더욱 가파르다. 올해 1~8월 중 식료품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평균 9.5%나 뛰었다. 이는 지난 98년(9.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우유·닭고기 등은 20~30%대의 급등세를 보여 서민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더욱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선 수급 조절이나 답합 방지 등을 통해 추석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

국내 물가상승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 원자재 동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와 국제유가 급락 등에 힘입어 울퉁불퉁한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으나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섰고 금·구리 등 원자재 값 역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각국이 경기회복을 위해 시장에 경쟁적으로 쏟아낸 풍부한 유동성을 제때 회수하지 못한다면 인플레이션 우려도 크다.

이같은 상황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물가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다. 정책의 시기를 놓칠 경우 효과가 반감되기 마련이다. 유가와 환율 오름세가 겹치면서 물가가 급등했던 지난해 경험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물가가 오르면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이다. 서민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물가를 잡는 게 급선무다.

알림

지방분권 정책 포럼

지금 세계는 국경을 초월한 지역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 패러다임은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중앙중심에서 지방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의 한법 개정 논의는 주로 중앙정부의 수평적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한국지방신문협회는 공동으로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분권형 한법 개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09. 9. 16(수) 10:40~13:1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국회실(19층)
- 주제: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분권형 한법 개정

-발제: 최봉서 교수 (동국대 교수)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한법 개정'

-지명토론: 최환용 실장 (한국법제연구원 법제교류지원센터)
김중권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현 팀장 (부산일보)
김성호 실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주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한국지방신문협회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독독신·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점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다자간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여수박람회 '민자 호텔' 건립 무산

우선협상자 일사(주) '무리한 요구'로 최종협상서 탈락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핵심 인프라인 민자 호텔 건립이 결국 무산됐다.

11일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여수박람회 지구 내 호텔 민자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통일그룹 계열 일사해양산업(주)이 이날 최종 협상과정에서 탈락함에 따라 사실상 민자 호텔건립은 무산됐다.

일사는 투자 조건으로 사업비 718억원 가운데 54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의 리조트(콘도) 회원권 구입, 160억원의 은행대출 앞선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는 무

리한 요구라고 판단해 일사(주)의 사업자 선정을 포기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 같은 조건은 일사 측이 사실상 자기돈을 들이지 않고 호텔을 짓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조직위는 이에 따라 크루즈 선박을 임대, 해상호텔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여수엑스포 숙박시설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조직위 관계자는 "박람회 지구 내 민자호텔 건립은 무산됐으나 박람회 지구 밖 민자호텔 건립은 계속 추진되고 있어 전반적인

숙박 인프라 문제는 좀 더 지켜보면서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19일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장 호텔 등 숙박시설 건설을 위한 민간투자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2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에이케이이엔디가 총사업비 2000억원에 332실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일상해양산업이 총사업비 646억원에 200실 규모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호텔은 여수박람회사이트내 건립돼 다른 곳에 계획된 호텔보다 경쟁력에서 앞서 민간투자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단 2곳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예상밖의 공모결과라는 평을 받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평통 전남지역회의 워크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협의회장 및 청년위원 워크숍이 11일 오후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해 주영순 민주평통 전남부위원장, 이태호 전남청년위원장, 청년위원 및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연차 돈 받은 박관용·김원기 執猶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억 951만9천원을, 김 전 의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2천 34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장의 혐의에 대해 "6선 의원과 국회의장을 지낸 원로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의장에 대해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며 2차례에 걸쳐 모두 1만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액수가 1억원이 넘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며 "다만 법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화갑, 민주당 복당

민주당은 11일 당원자격을 심사위원회를 열어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김경재 전 의원, 송인배 전 청와대 사회조정2비서관을 복당시키기로 결정했다.

한 전 대표와 김 전 의원, 송 전 비서관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탈당했고 이 중 한 전 대표와 송 전 비서관은 각각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특히 동고동락 핵심인사인 한 전 대표는 지난해 총선 직후 복당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으며 지난달말 당에 복당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재보선 '전략 카드' 만지작

수원 장안-손학규, 안산 상록-김근태 등 거론

민주당이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승률을 높이기 위해 전략공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주요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확정했던 과거 선거들과 달리 전략공천을 통해 재·보선의 승률을 높여겠다는 것.

당내에선 국회의원 재선기가 확정된 4개 지역 가운데 경남 양산과 수원 장안 등 2개 지역구가 전략공천 대상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양산 재선거에선 전노 386인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의 공천이 사실상 확정됐고, 수원 장안에선 손학규 전 대표를 전략공천하는 주장에 대해 별다른 반론이 없는 상황이다.

손 전 대표의 경우 본인만 정계복귀를 결심할 경우 전략공천에 별다른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손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금껏 예비후보들간의 치열한 경쟁구도가 펼쳐졌던 안산 상록을에서도 전략공천 실시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던 김근태 전 의원을 이 지역에 전략공천, 수원 장안의 손 전 대표와 함께 이번 재·보선의 '투톱'으로 활약하게 하겠다는 것.

특히 안산 상록울의 경우 열린우리당 출신인 임종인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뒤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김 전 의장의 공천이 야권 단일화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1년여간 여의도를 떠나있는 김 전 의원이 출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논문·병역·납세 철저히 검증하겠다"

민주 정운찬에 '전면전' 예고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버리고 있는 민주당이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나섰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11일 YTN 라디오에 출연, "논문 이중계제, 소득세 탈루, 병역비리 의혹 등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갖고도 도덕성을 상실했고 실정법 위반이어서 (총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석·박사 논문도 논문 색인 등에서 발견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정 후보자는 작년말 한 특강에서 대우 사업을 비판해 놓고 총리 지명 후에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자리에 연연해 변질했다", "국학아세의 표본"이라는 비판도 이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인사청문위원인 강은태 의원은 "청문회에서 '위장'을 밝혀내겠다"고, 최재성 의원은 "화자로서의 하자 여부를 따지기 위해 '논문과의 전쟁'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으름장을 놔다.

민주당은 이날 원혜영 전 원내대표 주재로 '총리청문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방향과 당 차원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TF 위원장인 원 전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가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 관계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국정철학과 자질을 가졌는지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정운찬 "병역면제, 문제없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11일 '병역 회피' 논란에 대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수차례 신체검사를 받거나 입대를 지연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 후보자는 이날 "대학 1학년 때인 1966년 첫 신체검사 당시에는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아들) 규정을 몰랐는데 이후에 병역법에서 부선망 독자는 징집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무안반도 통합 싸고 신안군 갈등

군의회 "통합 반대" 결의에 주민들 "자리 연연" 반발

목포와 무안, 신안군을 하나로 묶는 무안반도 통합에 호의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신안에서 통합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 통합추진에 따른 내부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안군의회는 11일 오전 186회 임시회에서 '지역 특성을 무시한 무안반도·신안군 통합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통합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최근 중앙 정부와 일부 지역의 특정세력이 주도한 무안반도 통합논의는 도사로 형성된 신안의 지리적 특수성과 5만 군민의 의사를 무시한 논의로, 포다시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킬 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안군의회는 이 같은 통합 반대 결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일부 주민들은 "무안반도가 통합됐을 때 어떤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는지 따져 보지도 않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의원들이 자리에 연연해 '집행부의 전위대'로 나서 통합을 무조건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또 무안반도통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무안지역의 반대로 실패로 끝난 3번의 무안반도 통합 관련 주민투표에서도 신안의 찬성률이 70%를 넘겼고, 지금도 찬성하는 주민이 많은데 의회가 주민 전체 의견의 양 반대 결의문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안=조원일기자 wncho@

빛日만평

- 김종두



이래놓곤 누굴(?) 탓해